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 부여해야

도의회, 두세훈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혁신도시 정책 취지 살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채용 시 이전기관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지역인재의 무채용 목표를 2022년까지 30%로 확



대·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두 의원은 "현행 제도 상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을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전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비율이 이전 국가기관의 비율보다 낮기 때문에 전북도의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을 살리고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두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두 의원은 "지역인재 지역가산점제도는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전명한 헌법 제122조, 제23조를 근거로 한다"면서 "특히 교원 임용시험 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한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합의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삶의 현장 찾아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도 지역위원회별로 각종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진행한다.

'국민 속에서 직접 듣겠습니다'

민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추진
전북도당도 민생개혁 과제 현안 경청 나서
29일부터 지역위에서 당원 등 대상 설문조사

더불어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삶의 현장 찾아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25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물론,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국민 속에서 '쓰소리 경청'에 들어간다. 이에,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전주 병)도 지역위원회별로 각종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민생개혁 과제와 현안 경청, ▲권역별·지역별 지역 민심 수렴, ▲전문분야별 현안 청취 등 지역과 분야를

아우르는 소통과 경청을 진행한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민심을 듣고 이를 민주당 혁신을 위해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각 지역위원회는 당원과 비당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민심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도당에 제출, 도당은 이를 취합해 중앙당에 보고하며, 송영길 당대표가 다음 달 1일 최종적으로 당 쇄신 방향과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내국민보고'를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해야"

국주영은 도의원 "품목 확대·제품 설명회 등 통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전북도에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0.2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7위로 최하위였고, 최상위의 제주도에 (1.17%)비하면 약 20% 수준이며, 도내 14개 시·군 평균 구매비율 (0.67%)에 비해도 약 3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구매를 촉구했다.

국주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하고, 각 공공기관마다 연간 물품구매액 중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했다"며 "하지만, 전북도는 지난 2018년 0.3%, 2019년 0.4%로 법정기준에 한참 밀렸고, 지난해는 이마저도 감소, 전년에 비해 반토막 수준인 0.23%에 그쳐 전국 및 도내에서 최하권

이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주 의원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구매촉진책을 마련하고, 전북도의 모든 실국의 구매 성과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장애인 생산제품의 품목확대와 품질을 높이는 기술지도와 장애인 제품 설명회 등을 통해 구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국주영은 의원은 "평안하고 안정돼야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전북도의 사자성어인 영정 치원은 도내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 때 가능한 것"이라며 "자립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당당한 우리사회의 경제적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재차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테크노파크 운영 부실... 책임행정 필요"

최영심 도의원 "방만한 운영 방지 등이 기관 혁신 저해
경영평가 결과 따라 직원 성과급 결정, 평가에만 매달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교육위원회·정의당)은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테크노파크의 운영부실에 대한 전북도청의 책임행정 구현과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의회가 전북테크노파크 임금여건 사세를 지적하고 올해 3월 또다시 운영부실에 따른 쇄신책 마련을 지적했음에도, 전북도는 그 책임을 테크노파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테크노파크는 한 해의 성과에 대해 두 가지 잣대로 평가를 받는 기관인데도 해당 기관의 운영부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

북도의 자체 경영평가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도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방지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관의 혁신을 저해하고, 과도한 감시와 통제로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전북도 전주시 등) 그리고 지역 혁신기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부의 경영평가와 전북도의 자체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오로지 평가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관련 기업들에게도 빈번한 자료제출 요구로 빈

축을 사는 등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9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를 제외하거나 자체 평가가 필요할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중북된 평가로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크노파크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노사가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무리한 정규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세심한 관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최영심 의원은 송하진 지사는 재단의 이사장이며 전북도는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 그리고 감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속 직원을 보듬고 격려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당부하고 "전북 테크노파크가 지역 혁신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영 효율성과 운영의 합리성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건립 재검토를"

나인권 도의원 "매립고 등 확대 변경 과정에서 전북도·김제시 등 행정기관의 대응 허술"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평선산단 내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대 건립을 규탄하며, 전북도 등을 상대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호남 제1곡창지대에 난데없이 당초 계획보다 6배 확대된 전국 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등장해 뒤늦게 맞은 지역주민들이 농민기에 결사 투쟁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고와 매립용량을 확대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전북도와 김제시 등 행정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지평선산단단지"는 전북도가 지난 2008년 9월 지평선산단단지를 지정 고시한 이래 4차례에 걸쳐 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처리시설의 매립고는 종전 10m에서 50m로 높아졌다.

매립고를 50m로 확대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북도는 매립고 확대로 인한 매



립용량 증가의 심각성과 주민 반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해줬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매립고 확대 승인 이후 산단개발 시행사인 '지엔아이'는 매립용량이 6배 증가한 111만6,900 입방미터로 추가 변경을 요청하자 전북도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법적싸움으로 돌입했다.

1심에선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북도는 올해 1월 갑자기 최종 상고(3심)를 포기했다.

나 의원은 항소심에서 환경피해를 입증한 자료나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패배한 전북도를 비판하며, 동시에 사업시행자와 폐기물처리업체의 묵시적인 중시해결을 한 항소심 재판부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

매립용량 확대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고, 처리용량 증가가 공익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주민들이 받게 될 환경피해의 악영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부지매입 당시부터 계획된 폐기물 용량을 알고 매립했음에도 사업시행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매립용량을 6배나 확대 변경한 행위는 이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목적인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주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공익적 가치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매립용량 확대 과정에서 특히 의혹이 제기된 해당 시설과 관계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나인권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건립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주문함에 따라, 전북도의 후속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활성화 나서야"

황의탁 도의원 "기본재산 고갈 국내 농업경제에 큰 타격 우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이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기본재산 고갈이 국내 농업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자금 활성화에 적극 나서길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1972년 설립돼 지금까지 141조 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촌 경제의 지속 성장기반 마련과 소득 안정에 다짐을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기본재산의 급격한 고갈로 재정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기본재산 고갈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출연 중단과 기존 출연금 회수"라고 주장하며,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금 잔액 대비 보증 잔액을 나타내는 운용배수가 지난 2019년 이미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했다"며 "올해는 신규보증 전면 중단의 기준인 20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황의탁 의원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했지만 이를 반영해도 적정운용배수와 차이가 크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업자를 위해서라도 농신보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도, 국가 지정 명승지 늘리기 위해 적극 나서야"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정수)의원이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지정 명승지를 늘리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가 지정 명승지는 총 117곳인데, 이중 전북도는 진안 마안산 등 8곳에 불과해 전체 대비 10%에 불과하다"며 "명승으로 지정되면, 정부 주도의 보호 및 홍보 정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타 시·도는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명승 지정의 가치를 인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도내 우수한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들의 명승 지정이 이뤄진다면, 기존의 관광 및 문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도 뛰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김기영 도의원, 자원봉사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증을 도지사 명의로 발급, 종합시각장·국민체육센터·119안전체험관 등 마일리지 활용처 명시 등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며 "현재 전북도도 자원봉사 관련 정책들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해 자원봉사자들의 송고한 배려와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